



# 2025년 청년정책 예산 분석

Analysis of the 2025 Budget for Youth Policy

나원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1~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25년 예산안에서 청년정책 사업의 주요 변화를 검토하였다. 2025년 예산안에서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소득 9구간까지), 빈 일자리 3종 패키지 도입, 청년도약계좌 확대 등 기존의 일자리·주거 중심 정책에서 교육 및 자산 형성 지원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청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예산과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정책이 내역 사업 수준에서 운영됨에 따라 자료 활용 및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수립 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과 시행계획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예산·사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정책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며

최근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용 불안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거비 부담, 금융 취약

성, 저출산·비혼 트렌드 심화 등이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sup>1)</sup>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의 삶 개선 방안'<sup>2)</sup>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는 등 청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정책 총괄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청년정책을 강화해 왔는데, 유럽연합(EU) 이사회는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 강화를 권고했고 (2020. 10.), 2021년 말 유럽의회는 2022년을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하며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

2) 관계부처 합동. (2020. 3. 26.). 「청년의 삶이 달라집니다-청년의 삶 개선방안 [보도자료].

조정기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다.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조정실이 설치되는 등 청년정책 추진 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발표되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청년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빠르게 추진된 청년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 분야의 스마트 제조 인력 양성,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인재 양성 등 개별 사업이 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해 보인다. 노동, 문화, 복지 등 기능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특정 대상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업별 소관 부처, 분야 등이 다양하고 프로그램 예산제도하에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 특이점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2021~2024년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청년정책 사업을 분석한다. 분석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34세로 한정한다.

## 2 2021~2024년 청년정책 변화와 특징<sup>3)</sup>

### 가. 청년정책 변화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제9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해 왔으며, 2025년 시행계획은 올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2020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 이전에는 청년 대상 정책사업이 체계적이지 않았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정책은 초기 기반 구축 단계를 거쳐 안정적 운영, 자립과 성장 지원, 그리고 내실화 및 지속 가능성 강화로 이어지며 점차 구체화되었다. 정책의 초점은 단순 지원에서 점차 청년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확장되었으며, 단기적 성과를 넘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2021년에 자산 형성 지원 통합 및 확대 방안이 수립되어 2022년에는

3) 2021~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표 1] 2021~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진현황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2020. 12.) 청년정책 시행계획 첫 수립(2021. 3.)	종합적 청년정책 체계 공고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년)」수정·보완 및 청년정책 시행 구체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완성 단계
일자리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마련(2021. 3.) - 청년구직자 101.8만 명+9 지원 - 특고 직종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발굴	- 청년구직자 62.5만 명+9 지원 - 민관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제고	- 청년 일경험 8.4만 명 지원 - 재학생, NEET 청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공개채용법」 개정 추진	- 청년 일 경험 10만 명 지원 - 15만 명 재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창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주거	- 청년주택 5.4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 청년 8만 명+9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 내집 마련 지원	- 청년 임대주택 5.4만호 공급 - 청년 8만 명 대출지원 +월세 특별지원 15.2만 명 - 전세사기 예방센터(HUG) 구축(2022. 2.)	- 청년층 공공분양 5.3만호, 공공임대 4.8만호 공급 - 초장기 모기지(최대 50년) 지원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 청년층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 공급 - 자산 형성+내집 마련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교육	- 국가장학금 확대(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 지원) -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2021년, 70%) - 혁신공유 대학 8개 컨소시엄 (46개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 국가장학금 확대, 직업훈련 지원 -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2022년, 80%) -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계획 수립(2022. 상반기)	-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마련 - 자립준비 청년의 국가장학금 지원 성적 기준 폐지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2023. 1.) - 교육과 일자리 연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대학의 역할 강조	-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 양성 기본계획 수립(2024. 상반기) -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대폭 경감 - 지역 대학·산업 연계로 지역 인재 양성
복지·문화	- 청년자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 자산 형성 지원 통합 및 확대 방안 수립(2021. 하반기) - 가출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 신설 - 마음건강 바우처(월20만원, 1.5만 명) 최초 시행	- 청년내일저축계좌(10.4만 명) 지원 - 장병내일준비금의 1/3(33%)을 전역시 추가지원 - 자립수당(월30만원) 지급기간 연장(3→5년) 및 지급대상 확대('21년, 약8천명→'22년, 약 1만 명) - 청년 대상 마음건강바우처 제공	- 청년도약계좌 신설(2023. 6.) 및 청년병사 목돈 마련 등 자산 형성 지원 -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 체계 구축	- 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 요건 완화 등 - 가족돌봄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사업사업 추진 - 청년 마음건강 초기 진단 지원
참여·권리	- 청년참여위원회 20% 청년 참여 확대 -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2021. 하반기)	- 청년인재 DB 구축 - 청년 삶 실태조사 첫 실시, 청년통계 관리체계 마련	- 청년참여위원회 확대 지정(221개)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대폭 확대(현 9개 부처→ 장관급 24개 부처) - 청년정책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시스템 구축	- 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 참여 확대 - 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 - 온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주: 연도별 정부가 발표한 수립계획 및 신규 사업은 강조 표시함.

출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 3. 30, p. 12. [https://www.opm.go.kr/doc/\\_attach/file/2021/03//1llgZLdRZjRWloUecmU.hwp.files/Sections1.html](https://www.opm.go.kr/doc/_attach/file/2021/03//1llgZLdRZjRWloUecmU.hwp.files/Sections1.html);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2. 2. 14, p. 10.;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 3. 29, p. 10.;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 3. 29, p. 6.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이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며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이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2021~2024년 청년정책 예산

그동안 시행된 청년정책의 과제 수는 2021년 308개에서 2023년 39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과제 개편을 통해 356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중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21년 23조 8천억 원에서

**[표 2] 2021~2024년 청년정책 과제 수 및 예산**

(단위: 개, 조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제(개)	308	376	390	356
예산(조 원)	23.8	24.6	25.4	27.0

출처: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 3. 29, p. 6.

**[표 3] 2021~2024년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

(단위: 억 원)

분야	2021년	2022년	2023년 <sup>2)</sup>	2024년	4년 연평균 증가율
I. 일자리	82,197	77,496 <sup>1)</sup> (53,425)	57,731	58,854	△10.5%
II. 주거	87,039	88,380	104,201	115,911	10.0%
III. 교육	56,793	67,523	69,402	75,378	9.9%
IV. 복지·문화	11,623	12,219	19,531	19,083	18.0%
V. 참여·권리	685	874	888	1,233	21.6%
※기타(비청년정책 등 제외)	-	-	2,425	-	-
청년정책 예산(A)	238,338	246,493	254,178	270,459	4.3%
전체 정부예산(B)	5,579,872	6,076,633	6,387,277	6,566,182	5.6%
청년정책 예산 비율(A/B)	4.27%	4.06%	3.98%	4.12%	△1.2%

주: 1) 2022년 코로나19 한시 사업 감소(1조 3,374억 원) 및 내일채움공제 감소(6,696억 원) 제외 시 5조 3,425억 원임.

2)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제시된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함(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예산과 상이).

3) 정부 예산은 총지출(본예산 기준)임.

출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 3. 30, p. 13. [https://www.opm.go.kr/doc/\\_attach/file/2021/03//lllgZLdRzjRWloJecmU.hwp.files/Sections1.html](https://www.opm.go.kr/doc/_attach/file/2021/03//lllgZLdRzjRWloJecmU.hwp.files/Sections1.html);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2. 2. 14, p. 11.;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 3. 29, p. 7.; "2021~2024년 총지출 추이(본예산 기준)", 기획재정부. 재정분석통계.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

2024년 27조 원으로, 4년간 약 3조 2천억 원이 증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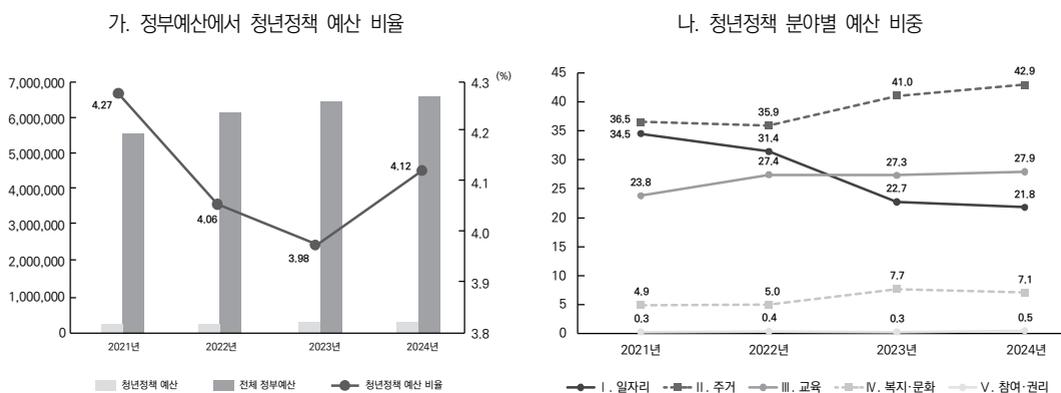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시행 초기 단계인 2021년에는 일자리 분야(36.5%)와 주거 분야(34.5%)가 전체 예산에서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교육 분야는 23.8%, 복지·문화 분야는 4.9%, 참여·권리 분야는 0.3%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 배분은 2022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는 주거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으로 확대된 반면 일자리 분야 예산은 각각 22.7%, 2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한시사업 종료와 내일채움공제 축소 등으로 일자리 분야 예산이 감소한 반면(〈표 3〉의 주석 1) 국가장학금 확대와 같

은 교육 분야 예산 증가,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으로 복지·문화 분야 예산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 예산은 4년 평균 9.9% 증가하였고, 복지·문화 분야 예산은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규모는 작지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참여·권리 분야로, 지난 4년간 평균 21.6%의 예산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부 예산 대비 청년정책 예산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4년 4.12%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 예산 증가 속도에 비해 청년정책 예산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보여 준다. 지난 4년 동안 정부 예산은 5.6% 증가한 반면 청년정책 예산은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예산에서 청년정책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림 1] 2021~2024년 청년정책 예산 비율 및 분야별 비중

(단위: 억 원, %)



주: (가) 청년정책 예산/전체 정부예산\*100, (나) 청년정책 분야별 예산/전체 청년정책 예산 합계\*100.

출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 3. 30, p. 13. [https://www.opm.go.kr/doc/\\_attach/file/2021/03//lllgZLdRZjRWloUecmU.hwp.files/Sections1.html](https://www.opm.go.kr/doc/_attach/file/2021/03//lllgZLdRZjRWloUecmU.hwp.files/Sections1.html);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2. 2. 14, p. 11.;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 3. 29, p. 7.; “2021~2024년 총지출 추이(본예산 기준)”, 기획재정부. 재정분석통계.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과제 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에는 교육부(38개), 문화체육관광부(37개), 고용노동부(36개), 국토교통부(31개) 순이며, 예산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8조 4,82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2개 과제를 수행하며 가장 많은 청년정책 과제를 담당했는데, 이는 2021년(21개)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제 수는 2023년 39개, 2024년 34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많은 청년정책 과제를 수행했는데, 2021년 37개에서 2022년 42개로 5개의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48개로 크게 늘었다가 2024년 37개로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국토교통부가 40개 과제를 수행하며 가장 많은 과제를 담당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가장 높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국토교통부의 과제

**[표 4] 2021~2024년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 수 및 예산(과제수 순 상위 10개 기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교육부 (38개, 5조 291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개, 864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48개, 4239억 원)	국토교통부 (40개, 11조 5118억 원)
2	문화체육관광부 (37개, 904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42개, 8334억 원)	교육부 (44개, 6조 612억 원)	교육부 (39개, 6조 4236억 원)
3	고용노동부 (36개, 6조 1100억 원)	고용노동부 (41개, 5조 9801억 원)	국토교통부 (43개, 10조 323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37개, 1629억 원)
4	국토교통부 (31개, 8조 4825억 원)	국토교통부 (39개, 8조 717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개, 4865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개, 3060억 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 4734억 원)	교육부 (38개, 5조 4989억 원)	고용노동부 (39개, 4조 3297억 원)	고용노동부 (32개, 4조 3986억 원)
6	중소벤처기업부 (20개, 7725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5개, 8033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9개, 5969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8개, 6724억 원)
7	농림축산식품부 (18개, 7545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17개, 6968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20개, 7786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20개, 1조 794억 원)
8	여성가족부 (16개, 303억 원)	여성가족부 (15개, 269억 원)	국무조정실1) (13개, 343억 원)	국무조정실1) (13개, 740억 원)
9	보건복지부 (10개, 4674억 원)	보건복지부 (11개, 1624억 원)	여성가족부 (13개, 276억 원)	여성가족부 (9개, 372억 원)
10	해양수산부 (8개, 79억 원)	국무조정실1) (9개, 20억 원)	보건복지부 (9개, 2519억 원)	보건복지부 (9개, 3015억 원)

주: 다수 부처 관련 과제(중앙행정기관 인턴) 예산을 총괄 부처인 국조실 예산으로 산정함.

출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 3. 30, p. 14. [https://www.opm.go.kr/doc/\\_attach/file/2021/03//lllgZLdRZjRWIoUecmU.hwp.files/Sections1.html](https://www.opm.go.kr/doc/_attach/file/2021/03//lllgZLdRZjRWIoUecmU.hwp.files/Sections1.html);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2. 2. 14, p. 12.;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 3. 29, p. 12.;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 3. 29, p. 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수는 2021년 31개, 2022년 39개, 2023년 43개, 2024년 4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예산 규모는 11조 5118억원으로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45.3%를 차지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 과제 수와 예산을 종합해 보면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과제의 약 70% 이상(2022년에는 64%)을 수행하였는데,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 규모 역시 상위 10개 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핵심 부처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정 기관에 재정이 집중될 경우 정책의 다양성과 균형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청년정책이 일부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책 운영의 균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2025년 청년정책 예산 분석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예산안'(2024. 8.)에서 2025년 중점 투자 분야로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② 경제활력 확산, ③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④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분야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중점 투자 분야인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에서 "청년의 힘찬 미래 도약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청년정책이 세부 과제로 포함되었다. 이는

2025년에 청년정책 예산 증액과 함께 정부가 청년층 지원을 정책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미취업 졸업생 특화지원 신설, 구직단념 청년 취업 프로그램 확대, 특화훈련-일자리도약장려금-기술연수를 연계한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 사업' 등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의 소득 구간이 9구간까지 확대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2개교), 특성화 대학(7개교)이 확대된다. 주거·자산 분야에서는 최저 2.2% 금리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와 청년도약계좌 확대가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확대와 고독사 위험 청년에 대한 안부 문자 및 멘토링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다.

2025년 중점 투자 분야에서의 청년정책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24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은 신규 도입된 '청년주택드림대출'로, 2025년 약 7507억 원(순증) 지원될 예정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소득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약 5929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으며, '빈 일자리 3종 패키지' 사업도 2025년 신규 추진되면서 약 852억 원이 증액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사업들은 중점 투자 분야 중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 전체 청년정책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5] 2025년 중점 투자 분야 및 주요 내용: 청년정책 관련

중점투자	세부과제	분야별 세부과제	주요 내용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일자리) 일 경험 확대, 구직단념 청년 지원, 빈 일자리 채움 패키지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미스매치 해소	- 실질적 직무경험 가능한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중심으로 청년일경험 대폭 확대(4.8→5.8만 명) - (신규)취업·자격증 특강 등 미취업 졸업생 특화 지원 신설(6만 명), 구직단념 청년 취업 프로그램(5~25주 이상) 확대(0.9→1.2만 명) - (신규)특화훈련-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주+취업 청년)-기술연수(3~6개월)의 빈 일자리(10개 업종) 채움 3종 패키지 신설(5.8만 명)
		(교육)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지원 확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 특성화 대학 확대	-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지원(100만~200만 원, 100만→150만 명) 하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2개교), 특성화 대학(7개교) 확대 - (부트캠프) 대학·기업 공동 단기집중 교육 제공 및 채용 연계(미래차 분야+2개교) - (특성화 대학) 산업계 수요 기반 인재 양성 교원 확보, 기반시설 조정(21→28개교)
		(주거·자산)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도약계좌 확대	- (신규)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0.8조 원) -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지원 한도 확대(월 40만~70만 원→월 70만 원)
		(복지·문화) 고립·은둔 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정서·심리 치료,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안부 문자 및 멘토링 운영	- 정서·심리 치료,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1천 명) - (신규)고독사 위험 청년에 대한 안부 문자 및 멘토링 운영(5천명)

출처: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p. 25.

[표 6] 2025년 중점 투자 분야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

(단위: 억 원)

구분	2024년 (A)	2025년(안) (B)	전년 대비 증감 <sup>1)</sup> (B-A)	비고
- 청년 일 경험 지원	1,718	2,187	469	청년 일 경험 지원 확대(4.8→5.8만 명)
- 구직단념 청년 지원	428	728	300	(신규)졸업생 특화 취업 지원(6만 명), 청년 도전 지원 확대(0.9→1.2만 명)
- 빈 일자리 3종 패키지	-	852	852	(신규)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1.3만 명), 도약장려금(4.5만 명), (신규)기술연수(200명)
- 맞춤형 국가장학금	47,205	53,134	5,929	국가장학금 9구간 확대
- (신규)청년주택드림대출	-	7,507	7,507	최저 2.2% 금리 대출 제공(1.1만 명)
- 청년도약계좌	3,682	3,750	68	정부 매칭 지원 한도 확대(월 40만~70만 원→월 70만 원)

주: 2025년 예산안에 제시된 억 원 단위 기준으로 저자가 별도 산출한 금액임.

출처: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p. 25.

지금까지 청년정책 예산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정책 사업과 예산 간의 연계 부족이다.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정부 예산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등으로 체계화하여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분류체계이다. 그러나 청년정책 예산의 경우 이 체계 내에서 청년정책 사업을 독립적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청년정책 사업이 세부 사업보다 하위 수준인 내역 사업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표 7>에서와 같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기초생활보장 부문’ 혹은 ‘일반·행정 분야’재정·금융 부문’으로 상이하게 분류되지만, 청년정책 분류에서는 모두 ‘복지·문화’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 분류체계와 청년정책 분류체계 간의 이질성은 예산에 따른 정책 분류를 어렵게 만들며,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청년정책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데

**[표 7] 청년정책과 예산의 연계 방안**

프로그램 예산 제도							청년정책 사업			
							연계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청년정책 사업명과 일치)	신규/ 기존사업 여부	내역 사업별 예산액 (억 원) (예시)	청년정책 분류
보건 복지부	일반 회계	사회 복지	아동·보육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개발 관리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기존	100	복지·문화 분야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기존	100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 개발연구	기존	100	참여·권리 분야
							2030 자문단 운영 및 청년정책팀 사업비	기존	100	참여·권리 분야
보건 복지부	일반 회계	사회 복지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저축계좌	기존	100	복지·문화 분야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100	복지·문화 분야
금융 위원회	일반 회계	일반·지방 행정	재정·금융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청년 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기존	100	복지·문화 분야

출처: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 3. 29, p. 24.; “2021~2024년 총지출 추이(본예산 기준)”, 기획재정부. 재정분석통계.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큰 제약을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 관련 예산과 사업의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중앙부처 재정지원 인력양성사업 실태 조사’와 같이 내역 사업과 예산을 연계한 별도 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청년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청년정책 과제 수를 보면 수백 개의 과제가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내용이나 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각 부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청년 내일저축계좌(복지부)와 청년도약계좌(금융위) 등)이나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중앙부처 청년인턴 확대(국조실)와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기재부), 부처별 특화 일 경험 지원(5개 부처)과 청년일자리지원사업(고용부) 등) 간에 유사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중복 과제는 정책 효과의 분산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청년정책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중복되는 과제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비슷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사업은 예산을 통합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보다 큰 규모로 운영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4 나가며

청년정책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발표되면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 주거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빠르게 확대된 만큼 사업 간 연계 부족, 예산 배분의 불균형, 정책 간 중복 등의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인턴 프로그램이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면서 중복이 발생하거나, 교육·고용·주거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2025년 청년정책 예산안에서는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미취업 졸업생 지원,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청년도약계좌 확대 등 새로운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지원과 주거 안정 대책이 강조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정책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년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 배분의 조정과 정책 우선순위의 재설정 요구된다.

청년정책은 개별 부처 중심의 단기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실질적 자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복 사업을 정리하며, 청년정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향후 수립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과 시행계획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예산·사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정책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4. 8.).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분석통계. “**2021~2024년 총지출 추이 (본예산 기준)**”.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 접속일 2025. 2. 2.
- 관계부처 합동. (2020. 3. 26.). **청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1. 3. 30.). **2021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2. 2. 14.). **2022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3. 3. 29.). **2023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4. 3. 29.). **2024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 청년기본법, 법률 제19253호 (2023).

# Analysis of the 2025 Budget for Youth Policy

Na, Wonhe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reviews the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th Policy Action Plan 2021~2024, and provides an overview of key changes in the youth policy programs included in the 2025 budget. The Youth Dream Housing Loan is a newly introduced initiative. Another new addition is the Three-Pronged Open Job Package. The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has extended to cover families belonging to the bottom 90 percent of the income distribution. The Youth Leap Account features increased financial support. These changes represent, notably, the expanded reach of youth policies, which extends from jobs and housing to education and asset-building. These policies are evolving in the direction of providing youth with more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empowering them to become economically independent. Such developments notwithstanding, the link between youth policy budgets and related programs remains indefinite. In the context of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youth policy initiatives are administered not even as “constituent projects,” but at the “sub-constituent” level, which adds to the difficulty of assessing their performance in connection with their designated budgets. For the preparation of the Second Youth Policy Masterplan (2026~2030) and its action plan, work needs to be put into making a more systematic way of aligning budgets with program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n effective policy assessment system.